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4-8호 | 2024년 5월 10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이한주 | idp.theminjoo.kr

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쟁점

- 옹호논리의 현실성 점검 및 비판 지점 -

류 이 현 연구위원(정책학 박사)

《 요 약 》

■ 돌봄노동 관련 최신 현황

○ 2024년 최저임금위 뜨거운 감자, 최저임금 차등적용

- 지속적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→ 업종별 차등기준 설정의 어려움으로 무산
- 최근 저출생·고령화 이슈와 연관지어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불가피성 제기
 - 2018년 이후 보수정당 의원들의 지속적 법개정 시도

■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옹호논리 및 비판 지점

옹호논리	비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인력 부족②여성 경제활동 지원·저출생 해소③가족간병의 경제적 손실• 국익을 위한 선택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약자복지②한국노동자의 이익•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개별가구 직접고용②고용허가제 확대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인력부족은 저임금·고용불안·성폭력 등 노동환경의 문제→ ② 최저임금 이하 적용 국가 역시 출생을 감소 심각③ 공적 간병체계 구축은 정부의 책임 영역① ‘약자vs.약자’ 프레임에 가려진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→ ② 한국인 돌봄노동자 및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연쇄확장 및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① 개별고용인에게 더 큰 통제권 주어짐 → 노동자 인권침해→ ② ILO협정 편법적 이탈 → 국제기구의 한국 제재조치 위험

■ 정책대안

○ 돌봄의 공공성 확장 및 노동자 처우개선

- 숙련노동자 확보·유지 위해 호봉인정 및 장기근속장려급 확대 등
-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(ex. 사회서비스원) 운영 정상화 및 확대
- ‘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’ 제정

▶ 키워드: 돌봄노동, 최저임금, 최저임금위원회, 외국인노동자, ILO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1.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현황

○ 2025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개최 임박(5월14일 이후)

- 노동계, 사용자, 공익위원 각 9인씩 구성(현재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 인선 중)
 - 올해 노동계 위원 중 2인, 민노총·한노총 각각 1인씩 추천한 **돌봄노동자**로 구성

○ 국내외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현황

- 최저임금 지역별·업종별 차등적용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**합리적 기준 설정**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음
 -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“...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” → 1998년 이후 **사문화**
 - 차등적용 **업종 선정**의 현실적 **어려움**: 업종 매출, 영업이익, 인건비,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통계 기초자료 미흡, 적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어려움
-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 중 내국인과 **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례 없음**
 - 일부 산업별·연령별·지역별 차등지급하는 국가는 있지만, **상향식 차등**인 경우가 다수
 - ※ 상향식 차등: 산업별 협약 등을 전제로 특정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게 차등적으로 최저임금 책정
 - 과거 독일, 캐나다, 일본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등지급을 시도한바 있음
 - 그러나 기업들의 외국인력 선호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부족 및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 등 부작용 발생으로 결국 내외국인 동일 임금으로 선회
- 최근 **저출생·고령화** 이슈와 연관지어 돌봄노동자 ‘최저임금 차등적용’의 불가피성 지속적 제기
 - 경제지 중심(매일경제, 서울경제 등)으로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의 필요성 강조(2021년~)
 - 서울시, 필리핀 가사 관리사 도입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(2022년 말~)
 - 한국은행 보고서(2024.3.) “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”: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 → 민노총 등 돌봄공공연대는 보고서 비판 및 폐기 촉구

○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개정 시도 및 저지 현황

- 2018년 이후 **보수당**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가 지속됨
 - **민주당** 이수진 의원 ‘**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**’ 발의(2022년)
- 최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**외국인가사노동자**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법안 발의(2023.3.)
 - **민주당** 의원들 발의에 동참하지 않음
 - 한국노총 주최, 22대 **민주당** 당선인 초청간담회(2024.4.19.)에서 최저임금차등적용 저지 (외국인노동자 포함)를 촉구: 김남근·김윤·김현정·박홍배·염태영·이수진·이용우·이학영·한창민 당선인 참석

▷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간의 오해 (ex. 과다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)

- 이민자 규모 1% 증가 시 사회복지·보건·교육 등 재분배 정책 지출은 0.22%씩 감소
 - 이민자들이 복지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되고 있음ⁱ
- 외국인 건보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1조 4,095억원(2022년 기준), 이들이 사용한 급여비는 9,200억원 → 5,715억원 재정수지 흑자 → 2017-2020년 동안 1조 4,095억원 흑자ⁱⁱ

2. 돌봄노동에 대한 이해

○ 돌봄노동 ‘저생산성’과 ‘여성화’

▷ ‘돌봄(care)’의 정의ⁱⁱⁱ

- 의존적인 개체를 자립으로 이끌거나 자율성을 상실한 의존자에게 제공되는 보조적 서비스
- 전자는 양육이나 단기적 간호, 후자는 노인 및 환자 대상
-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노동: 가사노동, 아동 및 고령자, 환자의 케어, 지역 자원봉사
- 노동, 생존유지를 위한 자급용 생산을 포함

- 돌봄노동의 ‘저생산성’

- 돌봄노동은 **생산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**, 애초에 생산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

돌봄노동

→

노동력 재생산

→

자본 재생산

※ 돌봄노동 없이는 노동자는 스스로를 재생산 할 수 없고, 노동자 없이는 자본이 재생산될 수 없음^{iv}

- 생산과 소비의 장소 동일
- 생산과 소비 동시 수행
- 사전 생산·저장 불가능
- 전통적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대표적 비전형 노동

→

설치, 정비, 생산직, 농림어업직 등과
생산성을 비교할 수 없음

- 돌봄노동의 여성화(feminization)

- 산업화 이후 시장에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주된 제공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‘**생활**’ 영역에 방치

과거의 돌봄노동

- ▷ 제공자가 주로 여성
- ▷ 제공 장소는 주로 가정
- ▷ 인식:
사랑과 (기꺼운) 희생의 행위^v

→

- 산업화 -
남성의 노동력이
가족 생계부양의
원천으로
여겨지던 포디즘
체계(Fordism)

→

오늘날의 돌봄노동

- ▷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환
- ▷ 행위주체의 대다수가 여전히 여성
- ▷ 인식:
부수적·비전문적인 노동
노동이 아닌 ‘생활’의 영역에 방치

○ 돌봄노동에 대한 가부장적 이해가 초래한 결과: 노동자성 불인정

- 돌봄노동은 (가사노동과 함께)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
 -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11조 ‘가사사용인 적용 제외’ 조항에 의해 **그림자 노동**으로 방치
 - 사회보험에 하나도 가입되지 않은 비율 21%^{vi}, 실업급여, 최저임금 인상, 통상임금, 퇴직금,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
 - 공공고용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며, 직업훈련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직업훈련기관이 거의 없음
 -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고립감 및 감정적 스트레스, 낮은 자존감, 높은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
- 특히 재난(ex. 코로나-19 팬데믹) 시 복지 **사각지대**에 방치
 - 코로나-19 팬데믹 당시, 돌봄노동자는 소득감소, 재직 및 해고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웠음
 - 재직증명이 불가능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, (개인고객에게서) 해고 이후에도 긴급고용지원금 수령에 어려움 겪음

- 소득이 현금거래였던 경우, 소득감소 증빙을 못함
- 기본적으로 고령의 노동자이기에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며, 전담기관이 부재했고 행정창구마다 지원대상자 여부 판단 및 해석이 달라 혼란이 발생
- 돌봄노동의 ‘보통의 노동자성’ 인정 대신, 개도국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전가
 -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의한 돌봄공백을 국제적 외주화^{vii}로 해소하려 함
 -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‘보통의 노동자성’ 획득이 더욱 어려워짐

3. 옹호논리 vs. 현실가능성 및 비판지점

□ 쟁점① - “저렴한”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

○ 옹호논리

- 돌봄시장의 인력 부족 개선
-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& 출생률 제고
- 가족 간병의 경제적 손실 개선

인력 부족 개선	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& 출생률 제고	가족 간병의 경제적 손실 개선
▷ 서비스 고비용의 원인인 공급자 부족: 저학력 50~60대 여성 노동자 감소 ▷ 돌봄노동과 같은 저생산성 부문에 내국인 인력이 물리는 것은 자원배분 측면에서 비효율적	▷ 홍콩, 싱가포르, 대만: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	▷ 익명의 최저임금위 위원회의 의견: “가족 간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 업종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” ^{viii}

⇒ 현실가능성 및 비판지점

- 인력 부족?
 - 돌봄노동자 부족의 원인은 저학력 고령의 여성인구 감소가 아님
 - 돌봄노동자 중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나 요양보호사 등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증가추세
 - 저임금, 고용불안, 성폭력 등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이 노동자의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회피 현상의 원인
 - 가사노동, 육아, 그 외의 돌봄 노동자를 구분하여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함
 - 영유아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가사 및 육아노동은 구분하는 추세
 - 육아를 중심으로 한 돌봄노동은 공보육 확대나 노동시간 단축, 육아휴직 등에 의해 일정정도 해소 가능하지만, 노인돌봄 분야는 또 다른 정책적 접근 필요
- 자원배분 측면에서의 비효율?
 - 가부장적·포디즘적 생산성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구시대적 접근
 - 포스트 포디즘(Post-Fordism) 시대에 비물질적 노동에 대한 가치평하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림

-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및 출생률 제고?

-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하는 **홍콩, 싱가포르, 대만 모두 출생률 심각하게 감소**
 - ※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짐 → 이미 아이가 한명 이상 있는 가정의 돌봄노동자 활용도 높음
 - ※ 최저임금 이하 지불하지만 고용주의 기타 의무 및 임금 외 비용(숙식 제공, 의료비, 항공료 등) 존재
- 홍콩(ILO차별협약 비준하지 않음), 싱가포르(최저임금제도 없음), 대만(ILO 비회원국)은 한국과 **제도적 여건의 차이가 큼**
- 기타 최저임금 차등적용 국가들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정의, 책정기준이 한국과 다른 경우 다수

- 가족 간병의 경제적 손실 개선?

- 한국의 사적 간병 비율 60.5%^{ix}이며, 가족 중 주로 간병을 담당하는 사람의 연령은 60대 이상 (30.7%), 성별은 여성(65.5%)^x
- 한국의 특이한 **행태인 사적 간병과 고령자 및 여성 가족구성원에게 전가되어 있는 간병의 책임은 정부가 공적 간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할 및 책임을 다 해야 할 사안**

□ 쟁점② - “국익”을 위한 선택

○ 옹호논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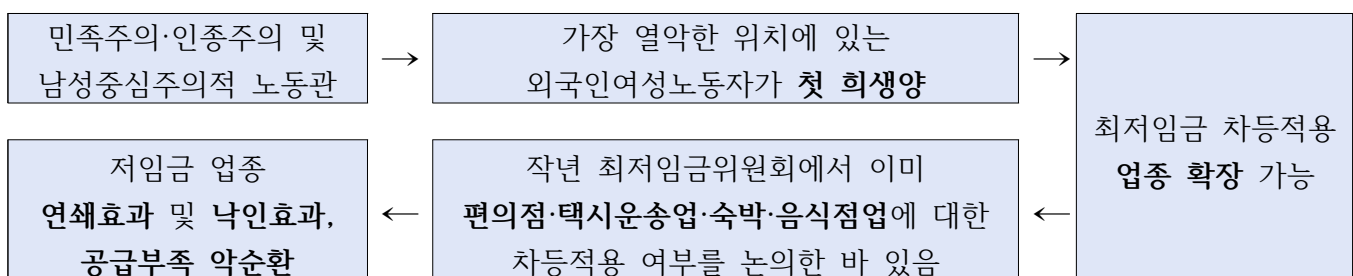
- 약자복지
 - 저렴한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도입하면 돌봄서비스가 절실한 여성, 영유아, 환자, 이들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
- 한국인 노동자의 이익
 - 최저임금 산정 시 경영계는 업종구분 무산을 상응 폭 제한의 근거로 삼아 왔음 → 업종을 구분하면 차등적용 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 가능성 높아짐

⇒ 현실가능성 및 비판지점

- 약자복지?

약자 vs. 약자 대책구도	효과
‘돌봄 수요자 vs. 돌봄 공급자’ & ‘한국인 돌봄노동자 vs. (중국동포)돌봄노동자 vs. 미등록체류 외국인 돌봄노동자’	→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와 사업주의 역할 숨김 • 기존 돌봄노동 시장의 노동자 간 경쟁 심화 → 한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의 위기 • 외국인 돌봄노동 시장 음성화 심화

- 한국인 노동자의 이익?



- ※ 현재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차별적·반인권적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으며, 민주노총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포용 기조를 발표한 바 있음^{xi}
- ※ 연쇄효과: 1998년 현대노동자 파업 당시, 남성노동자들은 복직되었으나 식당여성노동자들은 하청업체로 넘어가며 파업이 마무리 됨. 그러나 곧, 공장 생산라인 밖의 남성노동자, 생산직 남성노동자, 그리고 사무판매직 노동자 순으로 연쇄적 비정규직화 진행 → 결국 전체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 됨
- ※ 낙인효과: “인종차별이 노예제를 만든 것이 아니다. 노예제의 필요가 인종차별을 초래한 것이다”^{xii} →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될 것

□ 쟁점③ -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현 가능성

○ 옹호논리

▷ 개별가구의 직접고용 가능	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별가구가 직접 고용한 “가사사용인”은 근로기준법을 따를 필요 없음 • 현행 최저임금법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허용하기에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의해 최저임금 미적용 가능
▷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 가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을 돌봄노동까지 확대하고 알선기관이 한국인·외국인 구분 없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한다면, 국내법과 ILO차별 금지협약에도 저촉되지 않음

⇒ 현실가능성 및 비판지점

- 개별가구의 직접고용?

- 한국의 주거 여건 상, 노동자들이 사용자 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숙소를 활용한다면, 근로기준법 11조 ‘가사사용인 적용 제외’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 가능
- 개별가구가 직접 고용했을 때, 노동자의 작업장(가구)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고용인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주게 됨 → 노동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, 노동권·인권 침해 발생 위험 증가

※ 이미 해외에서는 언어폭력, 부당대우, 업무상 착취와 초과노동에 시달리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

-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?

-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→ 정부가 ILO협정을 편법적으로 이탈하자고 제안하는 것
- ILO의 차별협약(제111호) 불이행 시,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 - ※ 2023년 총회에서는 벨라루스 제재 권고 채택, 이에 따라 UN협력사업 수행이 중단, EU, 미국 등 개발협력 사업 중단 및 일반특혜관세 미부여 등 각종 제재조치 이행^{xiii}
- 고용허가제(유사제도) 활용 해외 사례
 - 일본: 사실 상 영구체류 가능 | 가족동반 가능 |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 조건 | 그 외에도 한국보다 포용적 제도 운영
 - 독일·영국: 내국인과 동일 노동 조건
- ※ 최저임금 이하로 외국인을 고용하면,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노동자로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미등록체류 상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, 공권력의 통제·단속 강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것

□ 기타 쟁점

○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도 외국인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?

- 이미 새로운 노동력 수요국이 등장 → 이주노동자 확보를 위한 국제경쟁에 대비해야 함
 - 최근, 선진국이 아닌, 중국·결프·인도 및 심지어 라틴아메리카를 목적지로 삼는 이주노동자 증가
 - ※ 중국이 주요한 이주 자석(migration magnet)으로 떠오를 것: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노령화가 동시에 발생, 이촌향도로 공급되던 노동력 감소, 임금 상승으로 외국인 노동자 모집을 확대할 수밖에 없음^{xiv}
 - 전 세계의 중소득 국가에서 인구 노령화와 여성해방, 교육수준 향상이 발생 → 저숙련 노동자의 자국 내 공급이 고갈 & 돌봄, 건설, 농업, 공업,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력 수요 증가

4. 정책대안

○ 단기적 정책대안

- 전문성을 갖춘 숙련노동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
 - 양질의 돌봄서비스는 수요자의 삶의 질과 직결, 숙련노동자의 **시장이탈을 방지**해야
 - ※ 2021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중 입사자는 3,479명, 21년 전체 퇴사자가 2,876명: 입사자 수의 80% 이상이 퇴사^{xv}
 - 최저임금 = 최고임금인 현실 개선
 - 호봉인정, 연차사용, 대체인력 활용, 휴게시간 및 장소 확보
 - 요양노동자 장기근속장려금 인상: 장기근속장려금의 인상 및 구간확대, 모든 직종으로 확대 적용, 통합경력인정
 - ※ 장기근속장려금(2017년 도입): 3년을 근속 시 6만원 수당. 요양보호사 중 10명 중 1명이 받고 있으며, 기관 이전 시 통합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력이 0이 됨
- **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운영 정상화**
 - 지나치게 민간에 편중된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 기능 확대 강화
 -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**
 - ※ 사회서비스원: 시장화되고 사회화된 돌봄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모델
 - 서울시사회서비스원(서사원) 예산 삭감 철회 및 지원 확대
 - ※ 여당의 서울시의회 의원들,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사원의 실질적 폐지 결정
- 「**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(안)**」 제정

○ 장기적 정책대안

-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 확대

-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: 개별 가족과 여성의 비전문적·사적 영역 → 공적 영역

- 여성, 영유아, 노인의 삶의 질 근본적 개선

- 돌봄노동의 주된 수요자인 노인인구의 경제적·사회적 자본 개선: 양질의 식생활, 주거, 사회보장, 직업·경제 등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 노인의 전반적 건강상태 개선^{xvi}
-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적·경제적 여유 마련: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
- 가정 내의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남성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성차별적 임금체계 때문에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고 돌봄을 전담하게 되는 구조적 불평등 개선

- 이미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초과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

- 외국인 노동자로 형성된 돌봄노동시장 양성화 및 근시안적 외국인 노동자 정책 개선

i 김도원·이동원. (2020). 외국인주민이 한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. 이민정책연구원. 정책보고시리즈. 2020-04.

ii 이재훈. (2022). 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... 윤석열 '순가락론' 틀렸다. 한겨레신문(20220202), 출처: 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029433.html

iii 홍찬숙. (2018). 노동 4.0 인가 제 2 노동세계인가?: 노동 4.0 의 산업사회 관점 및 그 한계. 경제와사회, 165-192.

iv Benston, M. (1989). 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's liberation. Monthly Review, 41(7), 31-44.

v Romero, M., & Pérez, N. (2016). Conceptualizing the foundation of inequalities in care work.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, 60(2), 172-188.

vi 최영미. (2021). 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요 내용. 연구총서, 19-36.

vii Ally, S. (2005). Caring about care workers: Organizing in the female shadow of globalization. Labour, Capital and Society/Travail, capital et société, 184-207.

viii 김진현. (2024). 고령화시대,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. 국회간호정책토론회(2024.1.19.) 자료집, 13-32.

ix 장숙량. (2022). [기획3] 간호와 돌봄 기본권 보장.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(2022.9.1.), 출처: <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welfare/1906878>

x 김향미. (2023). 하루10만원 넘는 간병비...간병 경험자 81% “간병비 환자·국가 나눠 내야”. 경향신문(2023.5.1.), 출처: <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health-welfare/article/202305012130001#c2b>

xi 김향미. (2023). 하루10만원 넘는 간병비...간병 경험자 81% “간병비 환자·국가 나눠 내야”. 경향신문(2023.5.1.), 출처: <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health-welfare/article/202305012130001#c2b>

xii Williams, E. (2013). Capitalism and slavery. In Sociological Worlds (pp. 260-268). Routledge.

xiii 채민석·이수민·이하민. (2024). [제2024-6호]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. 한국은행 BOK이슈노트.

xiv 헤인 데 하스. (2024). 이주,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. 세종.

xv 박상혁. (2023). “나오지 마세요” 계약직 92%, 문자 한 통에 해고...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. 여성신문(2023.4.11.), 출처: <https://www.wome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4973>

xvi 김수영, 허성희, & 장수지. (2018).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: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. 보건사회연구, 38(1), 88-124.